

익명보도 남발이 신뢰성 떨어뜨린다

한 국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 중의 하나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 보도의 문제점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면이 필요한 TV보도의 경우는 덜한 편이나 신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사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

단순 생활기사마저 익명으로

발표기사의 경우 누가 “...발표했다” 또는 누가 “...밝혔다”고 취재원을 드러내지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도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이 습성화하다 보니 의도성이 없으면서도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익명보도가 기사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취재원을 적시하지 않는 익명보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실제 신문에 ‘당국자’ ‘관계자’ ‘당직자’ 라는 익명의 취재원이 많이 등장한다. 기사의 권위성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고위’ 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더러는 ‘최고위’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 이라는, 출처를 어렵하기조차 어려운 취재원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더러 ‘고위외교소식통’ 이라고 인용하여 뉴스의 신빙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단순한 생활기사에서도 ‘회사원 모씨’, ‘가정주부 K씨’ 따위를 예사로 쓴다. 또 ‘전문가들’ 은 “...한다” 또는 “...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 은 “...하다”라고 비판했다는 기사도 적지 않다. 복수의 취재원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어휘를 쓰지 않았을 텐데 인용부호까지 쓴다.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밝히고 시민단체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여러 특종기사상의 심사기준도 취재원을 제시하는 방식이 익명이나 현명이나 하는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문신문의 경우 취재원이 신분노출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익명보도의 이유를 설명한다.

한국신문은 취재원을 익명(匿名)으로 쓰느냐, 현명(顯名)으로 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으며 더러는 가명(假名)도 쓴다. 기사를 읽어 보면 기사작성의 편의를 위해 익명보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취재원과 부담 없는 접촉을 지속함으로써 취재협조를 얻으려고 익명보도에 의존하기도 한다.

외국은 익명보도 이유 밝혀

그런데 여러 특종기사상의 심사기준도 취재원을 제시하는 방식이 익명이나 현명이나 하는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언론에서는 현명보도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문신문의 경우 취재원이 신분노출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익명보도의 이유를 설명한다.

정치기사를 보면 청와대 대변인, 정당의 원내총무,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기사가 많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일수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TV화면을 보면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배경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신문은 익명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사건전개, 업무소관, 책임소재로 미루어 보아 독자의 입장에서조차 취재원이 누구인지 짐작되는데도 '관계자' 또는 '당직자'가 말했다는 식

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대변인의 성명·논평 중에는 욕설에 가까운 내용이 적지 않아 기사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데도 그의 이름을 분명히 밝힌다. 또 홍보성이 짙은 기사는 취재원을 드러냄으로써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선전하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 이런 종류의 기사는 많다. 정치기사 가운데는 출처가 불명하여 기사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기사도 더러 있다. "측근에 따르면..." "실세에 따르면..." 따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기사는 경제부처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해당 정부 부처가 "...라고 발표했다"고 기사화하면서 보도자료를 설명하거나 발표한 정책책임자·입안자를 거의 명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취재원이 장·차관이 아니고 실무진이라 기사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관계자' 또는 '당국자'라는 익명으로 처리한다면 재고할 일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익명보도가 아닌 현명보도가 중요하다. 취재원한테서 정확하고 적절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현명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해당 정책의 소관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뉴스수용자에게 가치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경제정책에 관한 기사가 입안단계에서 종종 보도된다. 이 경우 “재경부는 무엇 무엇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노동부는 …무엇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화된다. 이런 기사일수록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더욱이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엇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도 있다. 도저히 기사출처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런 기사는 대체로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익명보도의 남발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무단계에서 구상 중이라면 문제가 크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해당 부처 내의 의견조율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무산될 수 있다. 결국 해당부처가 정책혼선을 빚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뉴스수용자가 정책방향을 오해할 소지도 있다. 입안단계의 정책기사라면 취재원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론 조작에 이용당할 수도

이렇게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는 기사작성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검찰의 공적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알리는 기사에는 담당 부장검사가 누구라는 점을 틀림없이 밝힌다. 예를 들어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 검사장)는 …를 소환하기로 했다” 따위다. 또 법원의 판결기사도 담당 판사를 명시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 부장판사)는 …를 기각했다”는 따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법원과 관련한 기사

는 보도내용과 상관없이 판·검사의 이름을 꼭 밝히는 보도관행이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전통은 196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아마 기자들이 이른바 ‘영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취재협조를 얻고 민원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반기사에서는 그 내용이 취재원에게 호의적인데도 익명보도를 예사로 안다. 모 회사 이모 씨, K건설 박 과장, H대학 김모 교수, P 여고 2학년 최모 양, 정치실세 K 씨, 모병원 모 의사, 우모 씨(43·여·전북 전주시) 따위가 수두룩하다. 인명 또는 직장명의 영문 이니셜이나 한글 자음을 따서 취재원을 제시하는데 더러는 신원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익명보도를 남발하다 보니 가공의 인물을 취재원으로 삼은 추측기사가 아닌지 의심스런 기사도 적지 않다. 실제 신문기자의 작업량은 과중하다. 신문사들이 인력은 보강하지 않은 채 증면 경쟁만 벌여 취재활동은 커녕 기사작성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러니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내용이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을 보도할 경우 상상력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익명보도에는 더러 함정이 따른다. 취재 경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충족하려고 익명성 뒤에 숨는 취재원을 주의해야 한다. 정책기사라면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여론을 유리하게 오토하려고 익명을 전제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 정책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정책내용을 의도적으로 누출시키거나 타 부처의 정책수립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 여론을

**취재원이 장·차관이 아니고 실무진이라 기사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관계자’
또는 ‘당국자’ 라는 익명으로 처리한다면 재고할 일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익명보도가 아닌 현명(顯名)보도가 중요하다.**

유리하게 조성하거나 여론의 향방을 점쳐보려는 의도에서 정책윤곽을 누출시키기도 한다. 그것도 특정 신문, 특정 기사를 골라서 정보를 흘리기도 한다. 또 권력투쟁의 방편으로 익명보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이런 익명보도는 결과적으로 여론조작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 실제 정부정책이 기존의 보도내용과는 달리 수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언론은 그것에 대한 자기수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복수 취재원 원칙 지켜야

상대방을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면 익명보도는 곤란하다. 그런 내용은 반드시 취재원을 현명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기사 가운데는 취재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저급한 내용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아진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상대방의 반론을 기사 말미에 붙이는데 그것만으로 보도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권력중독증에 걸린 일부 매체들이 익명을 가장하여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경쟁후보를 매도했던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과열되면서 그런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익명보도는 되도록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수취재원의 원칙(rule of two sources)을 존중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언론재단이 발간한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을 보면 한국신문의 1면 기사 취재원 수는 1.75개로 2개가 안 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10.06개로 한국보다 5배 이상 많다. 실제 1면 머리 기사를 보면 ‘당국자’ 또는 ‘관계자’에 따르면 하는 식으로 한 명의 취재원에 의존하여 작성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취재원의 다양성은 풍부한 정보와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오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취재원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고의성이 없는 오보를 막기 위해서도 복수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라면 복수취재원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1980년 9월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흑인 여기자인 자네트 쿡은 이 기사로 풀리처상을 수상했지만 가공의 인물을 설정한 바람에 그 상을 반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본우위의 과점신문들이 변화의 모습을 시도하나 사세를 과시하려는 인상이 짙다. 이런 노력보다 익명을 버리고 현명을 찾으려는 자세가 소중하다. 이것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한 한국신문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김병]**